여전한 이방인…인권 사각 외국인근로자

해남서 일하던 동남아시아인 2명 전깃불·이불 없는 방서 노예 생활
좁은 방 감금돼 샤워기 물 마시고 임금체불에 폭언·폭행 다반사
일손 부족 광주·전남에 필요한데…잇단 인권침해 감독 강화해야

동남아시아인 A(25)씨는 지난 2019년 10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갖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해남의 한 김양식장에 취업했다.

동도 트기 전인 새벽 4시에 바다로 나가 오후 7시까지 일하고 받는 월급은 170만원이었다.

고된 바닷일은 차라리 견딜만했다. 사장, 사장 가족의 폭언과 폭행은 참을 수 없었다.

A씨는 "사장은 실수할 때마다 매번 때렸다. 'XX놈아, X새끼야'라고 욕을 했다"고 말했다.

A씨 뿐 아니다. 같은해 12월 같은 양식장에 취업한 외국인근로자 B(23)씨도 같은 열악한 처우, 폭력 등에 시달려야 했다. 사업자측이 불도 들어오지 않는 방을 숙소로 제공하는가 하면, 세 끼 제공하겠다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휴대전화 사용도 막고 방에 들어가 못 나오게 하는 바람에 샤워기 물을 마셨다고 이주노동자센터측에 진술했었다.

생계를 위해 가족을 떠나 낯선 땅으로 건너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하는 인권 침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의 경우 해외 외국인 노동자들이 젊은층 유출과 고령화로 만성적인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현장을 채우고 있는데도, 여전히 차별섞인 시선과 노동여건 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인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23일 목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남 김 양식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사건 조사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동남아시아 출신 노동자 2명이 지난해 10월과 12월 해남 김 양식장에서 36개월간 일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올해 4월까지 하루 13~14시간의 노동을 하며 폭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등록증은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았고 노동청에 신고해 체불임금을 받는가 하면, '일이 없으니 나가라'면서도 다른 업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서류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이들 단체 주장이다.

이들은 광주 외국인 쉼터를 전전하며 고용노동부 목포고용센터를 통해 다른 업체를 알아봤지만 사업주 허락을 받지 못하면서 다시 양식장으로 돌아갔는데, 깜깜한 방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는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018년에는 목포지역 한 어가에서 일하던 인도네시아인이 3개월 동안 100만원 밖에 받지 못하고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은 빼앗긴 채 선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쳤고 지난해에도 목포에서 일을 하던 인도네시아인이 업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며 고소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사업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노동자만 4만2209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이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치단체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관계자는 "바다, 농촌 등 고립된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지만 CCTV 등 증거가 없어 처벌받는 사업주들이 드물"면서 "행정당국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의 피해 신고를 구체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PC방 방역 꼼꼼히 23일 오전 광주시 북구의 한 PC방에서 북구청 직원들과 자율방역단원들이 PC방 시설을 소독·방역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위증 의혹' 5·18 당시 항공여단장 보훈처 보훈사업 참여 적절성 논란

6·25 사업추진위원으로 선정
계엄군 도청 진압작전 도움 준 군무원 국무총리 표창 지적도

국가보훈처가 추진하는 보훈사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 당시 1항공여단장이었던 송진원씨가 '6·25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 기억분과 민간위원으로 참여하면서 5월 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송씨의 경우 지난해 11월 11일 전두환(88)씨의 사자(死者) 명예훼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의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

송씨는 당시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측 변호인의 질문에 "다녀간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1항공여단장(송진원 단장)외 6명은 UH-1H를 이용해 5월 26일 13:10~14:45 광주에 도착했으며, 상무충정작전(도청진압작전)이 종결된 이후 5월 27일 1항공여단장외 5명은 17:45에 귀대'라고 적힌 항공병과사(1980년 5월 작성)가 드러나면서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송씨는 법정에서 헬기사격 여부도 부인했었다. 5·18기념재단 측은 위증죄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재판에서 버젓이 위증한 인물을 또 다른 진실을 찾아 기억하고 상처를 보듬어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 추진하는 6·25 기념사업 기억분과위원으로 참여토록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5·18 당시 계엄군 지시에 따라 계엄군 진입 저지용으로 옛 전남도청에 설치해놓은 폭약 뇌관을 제거한 군무원 배승일씨에게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하는 방안도 논란이 일고 있다.

배씨가 당시 계엄군 퇴각을 위한 협상카드로 옛 전남도청 지하에 보관됐던 다이너마이트와 수류탄등 폭약 등 8t의 뇌관 제거를 담당했었던 군무원으로 도청 진압작전(상무충정작전)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줬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같은 논란으로 배씨는 5·18 이후 '광주를 구한 미담'의 주인공으로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가 취소된 뒤 법적 소송을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냈었다. 5월 단체와 5·18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진상 규명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 표창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도청에 설치된 폭약을 제거하여 시민들을 구함'이라는 공적 조서에도, "배씨의 이번 표창은 과거 보훈 철회 소송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며 "KBS 5·18관련 다큐 제작에 참여했고,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위한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형 일자리 투자협약서 비공개 대상 아냐"

법원, 시민단체 손 들어줘

광주시가 현대차와 체결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사업 투자협약서'는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행정 1단독 서효진 부장판사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 '완성차공장 사업 투자협약서 및 부속 서류 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공개할 공익적 필요성이 공개하지 않아 얻을 이익보다 작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시민단체측은 광주시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협약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광주시의 비공개처분에 불복,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적정임금 부속협정서(1조), 상생발전협정서(2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3항) 에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내용만 기재돼 영업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영업비밀로 보더라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회사가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해당 정보의 주요 내용인 투자규모, 자본금 및 주주구성, 신설법인 생산차종, 생산규모, 고용인원, 가동목표, 근로시간 및 임금 수준, 근로자 복지프로그램 등은 이미 언론을 통해 상세히 공개됐고 공개되지 않은 부분 역시 특별히 공개하지 못할 만한 중요한 부분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지난 4월 공포·배포·게시 금지를 조건으로 언론사 및 노사민정협의회에 전문을 모두 공개한 적도 있어 전면 공개되더라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자동차매매단지 위법 행정처분 17년만의 시정조치에

서구의회 "행정 투명성·신뢰성 실추" 비판

광주시 서구가 풍암동 자동차매매단지 내 위법한 행정 처분에 대한 시정 조치를 17년 만에 요구 〈광주일보 6월 10일 6면〉 한 것과 관련, 서구의회에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데 따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김수영(무소속·가 선거구)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제285회 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5분 발언을 갖고 "풍암동 자동차 매매단지 4곳(1·3단지, 오토파크, 오토갤러리)에 대한 신규 매매사업자 신청 및 허가, 기존 자동차 매매사업자간 승계(양수, 양도)가 지난 2월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라며 "8년 전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바로 잡겠다고 나섰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구의회 안팎에서는 김 의원의 이같은 지적이 자동차 매매단지 업계의 주장을 반영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서구가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지난 2016년 기준 면적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매매단지에 관련 인·허가를 내줬다가 경찰 수사로 이어지는가 하면, 허가에 관여한 담당 공무원이 파면된 A자동차 매매단지 사건을 언급하면서 서구 행정에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당시 A매매단지의 경우 광주 최초로 옥상에서 매매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서구에서 받았다. 신규 자동차 매매사업자 신청 및 허가가 전면 중단된 다른 4곳과 조건이 달라 현재 관련 영업도 진행중이다.

A매매단지를 따라 나머지 매매단지들도 옥상 매매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하던 과정에서 서구가 17년 전 위법 행정 처분을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일부 사업자들이 제기하는 의혹이다.

김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서구는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서구는 하자가 있는 행정에 대해 인정을 하고 광주시의 권고대로 도시계획 도로가 완공될 때까지 사업자들과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와관련, "자동차관리법에 옥상을 연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감사원 지적도 받지 않아 특혜가 아니다"며 "진입로 문제를 해결하면 타 업체에게도 옥상을 연면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5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10758	1	남구 봉선로84번길16, 103동1층103호[주월동,주월동이지더원아파트1단지]84.9476㎡	아파트	349,000,000 349,000,000	
2019타경 18011	1	서구 내방로251번길10, 103동 1층 102호 [쌍촌동,광명하이츠타운] 84.93㎡[공유자정나형지분11분의2전부.현황조사서[2020.1.13.]에관리비1개월분미납으로조사되어매수인부담가능성있음[추가발생여지]]	아파트	24,545,000 24,545,00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그횟수1회로제한]
2019타경 71999	1	광산구 우산로47, 105동 3층 306호 [우산동,리버힐아파트] 49.86㎡	아파트	88,600,000 88,600,000	
2020타경 1033	1	남구 방림로31, 103동 2층 201호 [방림동,방림휴먼시아] 84.82㎡[2020.2.24.자현황조사서상관리비215,880원연체중으로조사됨[추후추가발생여지있음]]	아파트	307,000,000 307,000,000	
2020타경 1156	1	북구 면앙로32번길26-9, 3층 303호 69.85㎡	아파트	79,000,000 79,000,000	
2020타경 1484	1	화순군 화순읍 오성로468, 101동 8층 909호 [오성2차아파트] 59.825㎡	아파트	72,000,000 72,000,000	
2020타경 61059	1	남구 광복마을3길25, 5층 515호 66.78㎡	아파트	86,000,000 86,000,000	
2020타경 61370	1	서구 화개중앙로87번길15, 106동 8층 804호[매월동아델리움.로제비앙APT]84.7681㎡	아파트	430,000,000 430,000,000	
2020타경 61790	1	서구 화정로49번길38, 3층 302호 [쌍촌동,쌍촌동도시형생활주택] 16.9685㎡	아파트	55,000,000 55,000,000	
2020타경 61974	1	광산구 풍영로145번길18, 305동 11층 1101호 [흑석동,수완3단지중흥에스-클래스] 84.9684㎡[현황조사서[2020.3.6자]에관리비880,000원미납으로조사되어매수인의부담가능성있음[추가발생여지]]	아파트	399,000,000 399,000,000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0타경 62151	1	광산구 송정공원로11번길21, 202호 [소촌동,파크하우스] 70.98㎡	다세대	133,000,000 133,000,000	
2020타경 62274	1	광산구 송정공원로11번길21, 404호 [소촌동,파크하우스] 72.07㎡	다세대	140,000,000 140,000,000	
[대지/임야/전답]					
2020타경 1026	1	영광군 영광읍 와룡리 464 2370㎡[제시외 비닐하우스1개동매각제외]	전	23,226,000 23,22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0타경 1828	1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59-3 30㎡	임야	28,175,000 28,175,000	일괄매각.분묘수기소재
		동소 산7 2779㎡	임야		
		동소 산7-1 66㎡	임야		
2020타경 2227	1	담양군 창평면 일산리 300-2 2834㎡공유자임태관1562분의90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답	58,849,920 58,849,92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신고는1회에한함
2020타경 2432	1	담양군 무정면 덕곡리 산165 8430㎡	임야	11,211,900 11,211,900	
2020타경 62748	1	화순군 백아면 원리 산38-1 189030㎡[공유자정종규지분94661분의10000전부.분묘수기소재.북서측경계부분에타인소유제시외건물매각제외[감정평가서참조]]	임야	31,950,560 31,950,56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그횟수를1회로제한
2020타경 63109	1	나주시 다시면 영동리 821 585㎡	임야	10,530,000 10,530,000	
[자동차,중기]					
2020타경 269	1	사용본거지:광주 광산구 북문대로 399, 2층[신창동] 등록번호:광주72사1030 차명:BX212 연식:2016	자동차	140,000,000 140,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20타경 412	1	사용본거지: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101동 207호[매월동,매월종합상가] 등록번호:광주07다5357 기종:기중기 연식:1996	건설기계	40,000,000 40,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풍영정길65-15[주]대명씨앤피
2020타경 63079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본촌택지로29번길 22 A동 204호[본촌동] 등록번호:39주4812 차명:BMW 528i 연식:2014	자동차	27,000,000 27,000,000	보관:광주광산구우산천변길67-17서창다리주차장
2020타경 66030	1	사용본거지: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603번길12, 102호[청우썬비치빌] 등록번호:55거6520차명:SM6 연식:2019	자동차	21,000,000 21,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기타]					
2020타경 1293	1	서구 양동 168-2 52.9㎡	대	134,758,200 134,758,2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서구 구성로 117-3 1호 일용품소매점,사무실 1층36.90㎡ 2층36.90㎡ 3층36.90㎡ 제시외 상가일부 21.4㎡	일용품소매점		
2020타경 1675	1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196-2 446㎡	임야	81,402,000 81,402,0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1저온저장고매각제외
		동소 196-3 422㎡	대		
		동소 196-4 254㎡	임야		
		나주시반남면부흥길62-15 86㎡ 부속건물광40㎡[현황창고약62.0㎡]제시외창고등100㎡	주택		
2020타경 62410	1	동구 남문로754번길 11-3 1층69.22㎡ 2층47.60㎡ 부속건물 변소1.78㎡ 창고1.19㎡ 제시외 다용도실 등 19.9㎡	주택	182,171,290 182,171,29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구 학동 40-15 152.4㎡	대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2. 매각기일 : 2020. 7. 8. [수]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20. 7. 15. [수]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0. 6. 24.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문형준